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 정 -

【헌 법】

응시번호 :

이름 :

1.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으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해석의 지침을 말한다.
-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관점을 달리할 뿐 본질상 효과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분립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제시한 바 없다.

2. 우리나라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 역대헌법에서 명시적인 헌법개정금지조항을 둔 적은 있으나, 현행헌법에는 명시적인 헌법개정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② 1948년 건국헌법은 헌법수호기구로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다.
- ③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고,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 ④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3. 헌법의 수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은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서는 저항권을 적용할 수 없지만, 초실정법적인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저항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② 저항권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입헌주의적 헌법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저항은 인정되지 않으나, 저항권은 예외적 경우에는 폭력적 방법도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반민주적이고 헌법적대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예가 있다.
- ④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기본권실효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4. 현행 국적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반귀화의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등 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은 국내에 주소를 둘 것을 요건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즉시 발생한다.

5.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 ②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며,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④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 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6.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 ㉢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여 해산결정을 할 때까지는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한다.
-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벌 간에 적용되므로 정부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 정당이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7. 현행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까지를 말한다.
- ②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기초자치단체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불문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2인씩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④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향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선거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5.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국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③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④ 수혜적인 법률규정에서 배제된 자는 수혜를 배제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기간의 구속을 받는다.

16.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 중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부분은 무엇이 면허된 의료행위인지를 전혀 명시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②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 ③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 ④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정지의 규정을 헌법소원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17. 적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구별된다.
- ㉡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압수물폐기의 요건과 상관없이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하였어도, 이것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18.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검사법상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조항과 같이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간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③ 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 ④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이 불필요하다.

1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 ④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2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대법원은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국한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③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 ④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 ㉢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 ㉣ 음주측정거부자에게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2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 종교의 의식, 행사, 유형물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③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종교단체가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법상의 학원 형태가 아닌 교단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내지 교리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나,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3.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② 검열금지의 원칙은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도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이 금지된다.
- ③ 영화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④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2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 ② 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25.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이 비례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던 자가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다.

26.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사건의 수입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부분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29조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 및 제244조 중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중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조합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조합원 내지 공공의 신뢰를 지키고 직무에 대한 전념성을 확보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자영업 등 직업의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는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중사 기관에서 의무중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권리남용으로 인한 패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 공무원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중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에 관한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관할청에게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람들에게는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은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다.
-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그 상대방 당사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9. 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은 원내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들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연석회의는 위원회간 협의에 의하여 열리는 위원회로서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표결도 할 수 있다.

30. 국회운영 및 국정통제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는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
- ②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 ③ 국채를 모집하려는 경우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국회 본회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 발의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31.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 ②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 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 ③ 국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④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이라도 제외할 수 없다.

32.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소속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위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게 된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불과하나 이로 인하여 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헌법 제40조,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 ④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 ② 긴급명령권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은 헌법에 따라 직접 그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계엄선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긴 하지만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위헌위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④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② 위헌적인 법률을 법률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대통령당선인은 그 임기개시전이라도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거나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5.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행정각부의 장 및 검찰총장·대사의 임명,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등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나, 외국대사의 신임장 수리, 국무총리 임명 등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 ㉢ 대통령이 국회에 국군해외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장이 소집하나, 국무위원도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헌법 제89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으로서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열거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소위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6. 사법권 및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법률에 맡겨진 우리법제에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37. 사법권과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사·도의원 선거, 사·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한다.
-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③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④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정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와는 달리 위헌법률심판청구에 있어서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적법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 ③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때 재판은 중국재판을 의미하며, 중간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당해 소송에서 보전을 구하는 손해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분내용의 위법·부당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재판전제성이 있다.

39. 헌법소원의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③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 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②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의 정립작용까지 포함되고, 이에겐 법률의 제·개정행위도 포함된다.
- ③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침해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아직 장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위임한 사무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한 권한의 침해를 다투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